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으로 국가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명 이하(0.98명)으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9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속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주로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 지속력이 낮아지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저출생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 부은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12조원에 달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비는 1일 1,745원으로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일한 금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1,745원으로 점심식사와 아침·오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지원에 나서기도 하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부족한 음식비를 위해 영아455원 유아200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음식비 조사 결과, 최저 1,745원부터 많게는 3.6배 이상인 6,391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음식과 간식조차도 지역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에서 든든히 지원하여 미래를 기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이 산정·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평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